

국교 정상화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고이즈미(小泉) 재방북, 활로를 열 수 있을까

일본과 북한의 국교 정상화는 수단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정책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면 분명해지는 일이다. 이제 일본 외교를 재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글 _ 하시즈메 다이사부로(橋爪大三郎) 도쿄(東京)공업대학 교수(사회학)

고이즈미(小泉) 총리의 북한 재방문은 외교·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고이즈미 총리가 이 시기에 북한을 다시 방문하기로 한 데에는 미납 문제로 골치가 아파진 일본의 '연금(年金) 정국'을 리셋(reset)하고, 7월 참의원 선거를 위한 태세 재정비에 그 노림이 있었다. 납치 피해자의 가족을 평양에서 데려오기만 한다면, 국민은 박수갈채를 보내줄 것이고 '고이즈미 인기'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계산했던 것이다.

이러한 수완기는 들어맞아 주지 않았다. 10명의 '사망·행방불명자'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납치 피해자) 가족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의 교섭 자세를 비난했다. 지지율은 다소 나아졌

지만, 고이즈미 외교에 대한 실망감도 확대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와 씨름해 온 가족회는 연구를 많이 해서 사리에 맞는 행동과 발언을 하고 있다. 여론도 이들에게 동정적이다. 고이즈미 총리와 외교 당국은 '납치 피해자를 남김없이 구출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만 비로소 정부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는 국민 여론의 동향을 좀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이라크 인질 사건에서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인 것인지도 모른다.

이라크 인질 사건이 발생하자, 고이즈미 총리는 얼른 "자위대는 철수하지 않는다. 인질 구출에 온힘을 쏟겠다"고 발언했다. 이것은 잘한 일이다. 테러리스트의 협박에 정부의 행동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국제사회의 공동 룰이다. 이 원칙을 어겨버렸다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정부를 구성한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져버리고 만다. 이 테러리스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인질 구출에 전력을 다한다는 순서는 매우 소중하다.

일본국 정부는 외국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다. 그럴 만한 권한도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외국에서 일본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여권에 쓰여 있는 것처럼, 상대방 나라에 이를 의뢰하는 수밖에 없다. 상대국이 혼란한 상황에 처해 위협이 예상될 때에는 도항을 보류하라고 경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항하는 일은 개인의 자유지만, 정부의 구출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테러리스트에게 잡혀서 인질이 되더라도, 방치해 두는 것이 당연하며, 정부에는 구출 의무가 없다.

인질의 가족들은 뜻하지 않은 소용돌이에 휘말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인질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별의별 말을 다 토해 냈다. 본시 인질의 가족이란 그런 사람들이므로 무슨 소리를 하건 용서하는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이에 동요해서는 안 된다. 인질 사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일부는 가족에게 반감을 품고, 귀국한 인질에 대한 공격까지 있었다. 그러나 결

과가 좋았던 덕분에 아무도 정부를 비판하지 않았다.

북한의 납치 문제는 이것과는 판이하다. 많은 일본인이 국내에서 납치 당했다. 본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가족들이 끈질기게 운동을 벌인 끝에 정부를 움직여서 결국 납치 사건을 북한에 인정하게 만들었다. 그 덕분에 납치 피해자 일부가 귀국할 수 있었다. 이라크 인질 사건의 경우와는 달리 가족은 사건의 당사자인 것이다. 정부는 가족의 요망에 응해 외교 등 온갖 수단을 통해 납치된 사람들의 구출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

‘사망·행방불명자’ 10명(더 많은 실종자들이 납치된 것이 아닌가 의심되고 있다)의 진상 해명·구출과 하스이케(蓮池) 씨 등 납치 피해자 가족의 귀국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정부의 우선 과제인가를 묻고 싶다. 남겨진 가족의 귀국 문제는 매스컴에서도 되풀이해서 보도되어, 분명 국민의 관심과 동정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가족은 납치된 것이 아니다. 일본국 정부가 가족의 귀환을 요구하는 것은 인도적인 요구인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에 남겨져 있는 미귀환자의 귀국을 실현하는 일은 정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가족의 귀국과 맞바꾸어 호지부지해서는 안 될 문제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번에 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라크 인질 사건의 경우와는 달리 납치 사건의 가족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정당하고, 정부 외교 정책의 기본이 된다. 여론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런 것을 충분히 헤아리지 않고, 가족의 귀국을 서두른 것이 오산의 원인이었다.

북한으로서는 ‘바라는 바’였던 고이즈미 재방북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가족의 귀국을 서둘렀던 것일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가족의 귀국을 열망하는 여론에 부응해 정권의 인기 부양을 꾀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일·

북한 사이에 가로놓인 국교 정상화 교섭의 ‘장애’를 제거하는 일이다. ‘평양 공동 선언을 재확인했다’는 데에 방북의 의의가 있다고 하는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가족의 귀국은 바람직한 일이었다. 지난번 방북으로 행방불명자의 ‘사망’이 전해지자, 일본 여론은 금방 경직되고 말았다. 미국도 납치를 ‘테러’라고 단죄했다. 가족이 귀국하지 않는 한, 일본의 여론을 누그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북한도 깨달았다. 고이즈미 방북은 말하자면, 울고 싶던 차에 뺨 때려준 격이었다.

인도적인 관점에서 가족의 귀국은 당연하다. 다만, 그 배후에는 이러한 정치·외교적 배려가 깔려 있었다. 고이즈미 총리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외교의 청사진은 타당한 것이었던가. 그 여부를 가늠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과 북한의 국교 정상화는 도대체 일본의 국익에 합당한가.

국교 정상화란, 요는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이라는 뜻이다. 북한으로서는 군침이 돌 정도로 필요한 것이겠지만, 일본으로서는 중요한 과제가 아니다.

일본의 정책 우선순위를 확인해 보자.

첫째, 일본에서 사는 1억 3천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북한 같은 무법자 독재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일본을 사정거리 안에 두는 미사일을 다수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점이 국민에게 대단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거나, 독재적인 정치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 위협을 제거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일본의 국익이요 정부의 책임이다.

둘째, 북한에 납치된 사람들의 구출에 전력을 다하는 일이다. 이것은 자유 민주적인 국가로서의 일본의 존재 이유에 관계된 일이다. 이 사람들의 구출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말이다.

셋째로, 북한 사람들의 안전이나 건강과 복리를 위해 기여하는 일. 북한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면, 결혼해서 건너간 일본인 처와 교환선을 타고 북으로 귀환한 사람 등 일본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의 고난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 차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제3의 과제를 국교 정상화라고 부른다면, 그 전제는 핵(제1)과 납치 문제(제2)가 해결되는 일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외교는 도대체 북한에 대해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임했던 것일까. 그 모양새를 가늠할 수가 없다. 일·미 동맹 중시가 고이즈미 외교의 기본 자세지만, 그것과 대북한 외교와의 관계는 잘 알 수가 없다.

대북한 외교를 위한 국익의 우선순위가 이상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국교 정상화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핵과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교 정상화를 슬쩍슬쩍 내비치는 것은 좋다. 북한을 소프트 랜딩(soft landing: 연착륙)시켜서, 정상적인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맞아들이기 위해 국교 정상화라는 단계를 밟는 일에도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부 외무성은 국교 정상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자꾸만 느껴지는 것이다.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북한을 적대 관계에서 우호 관계로 유도할 수 있으면 일본의 안전보장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라도 한다는 말일까. 북한처럼 핵을 지닌 독재 국가에 일본에 대한 호의 같은 것을 기대할 일은 아니다. 일본에 대해 호의를 가지든 말든, 핵을 지닌 독재 국가의 존재 자체가 위협인 것이다. 북한이 그런 나라인 한, 국교 정상화를 할 필요도 없고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이 온갖 곤란을 무릅쓰고 핵 개발을 추진해 온 것은 미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이 문제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므로 일본이 나설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 셈이다. 미국은 중국의 협력이 없어 가지고는 북한에 충분한 압력을 가할 수가 없으므로, 중국을 참여시킨 6자 회담의 자리를

마련해 놓았다. 일본은 온힘을 다해 6자 회담의 뒷받침을 해야 마땅하다. 어설픈 국교 정상화나 원조 타령을 꼬집어내서 탄축을 걸 일이 아니다.

납치 문제는 6자 회담과는 분리된 일로서 국제 여론의 도움까지 받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은 북한을 추궁해야 한다. 일본이, 사건의 철저한 해명을 요구하고, 경제 제재 등을 내비치면서 원칙적인 자세를 취할수록 북한은 괴로운 입장으로 몰리게 된다. 그리고 타협을 할 개연성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이번 방북은 일본의 국익에 이바지했는지 의심스럽다. 우선 일본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 다음으로,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와 사전 준비를 해놓았는지도 의심스럽다. 자칫 잘못하면 일·미 동맹에 금이 갈 가능성까지도 있다. 실제로 이번 방북을 놓고 일본 '독자 외교'의 개막이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본의 외교를 재정립하면 좋을까. 우선 맨 먼저, 북한이 핵 폐기에 응하지 않는 한, 국교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확실하게 취해야 한다. 둘째로, 문제의 10명을 비롯해 안부 불명자 전원에 대해 철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로, 여론의 지지 아래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을 국회에서 성립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과 긴밀하게 유대를 가지면서, 핵 폐기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제거를 최대 목표로 삼아,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다. MD(미사일 디펜스) 같은 방위적인 장비와 반격을 위한 순항 미사일 등도 도입해야 할지 모른다. 그리고 국민에게 이런 점을 설명해서, 이해와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에 힘을 아끼서는 안 된다.

(『論座』 2004年 7月號「國交正常化を目的にしてはならない」/ 번역 김유동)

하시즈메 다이시부로(橋爪大三郎) 1948년 출생. 도쿄(東京)대학 문학부 졸업. 도쿄공업대학 조교수를 거쳐 현직. 저서로 『최초의 구조주의』, 『이처럼 곤란한 북조선』 등.